

사회

# '700명 감축' 전남 교사 대란

## 교과부 내년부터 학생수 기준 교원 획일 배정

## 도시벽지 특성 외면 줄폐교 초래 ... 강력 반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교원정원 배정방식 변경으로 내년엔 전남도내 초·중·고 교사 700명 이상이 감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수를 반영해왔던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도시벽지가 많은 전남지역의 경우 대규모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5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2010학년도부터 교원 배정방법

을 변경, 전국을 4개 군(群)으로 구분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1군(교사 1인당 학생수 20.97명)은 경기, 2군(20.80명)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3군(18.98명)은 충북, 경남, 제주, 충남, 4군(16.90명)은 전남, 강원, 전북, 경북 등이다.

이에 따라 도시 벽지가 많고, 학생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339개교에 이르는 전남의 경우 대규모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남지역 초등의 경우 현재 8천110

명의 교원 정원 중 290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등은 6천850명 중 424명이 줄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을 합하면 714명에 이른다.

교과부는 학급수 감축 운영으로 부족한 교원에 대해서는 전일제 강사 등 대체 인력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지만, 도시 벽지학교가 많은 전남의 경우 근무여건이 열악해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교원 정원이 대폭 감축될 경우 전남도내 일선 학교의 교사 부족 상태 등이 빚어져 학교 운영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도시지역에 비해 가뜩이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전남지역 학생들이 이젠 '스승'조차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담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 의 안건으로 제안하는 한편 교과부를 상대로 전남은 4군 배정에서 예외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의 한 고교 교장은 "지금도 도시벽지지역은 교사가 부족해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교사를 더 줄이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라는 말이나"면서 "제발 책상에 앉아서만 생각하지 말고, 나후린 교육현장을 직접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영암 살인마 사형 선고

## 동거녀·딸·조카 3명 성폭행 살해

## '보성 어부' 이후 광주·전남선 처음

동거녀와 동거녀의 딸·조카 등 3명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연쇄살인범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광주·전남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지난해 2월 보성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어부 오모(71)씨 이후 처음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5일 동거녀 등 여성 3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특수강간죄 등으로 1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4년도 못돼 범행한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귀를 좀 기울여 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5월 5일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오씨의 딸인 A(16)양을 성폭행한 뒤 손과 발을 묶어 여행용 가방에 넣은 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녀 A양을 질식사하게 했다. 당시 이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

해 본인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으며, A양 명의로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일주일 뒤인 5월 12일 집에서 동거녀의 딸 B(19)양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같은 날 밤 동거녀 C(41)씨도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이씨는 B양과 C씨의 사체를 각각 집안과 승용차 트렁크에 방치한 상태에서 동거녀의 조카인 D(18)양과 자신의 친딸(22)을 차례로 성폭행하는 등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1991년 미성년자 약취,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2005년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전처인 C씨와 동거해왔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문명국가 사법제도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사회보호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나원침 (7928) 김장동



# 신안 노인 150여명 식중독

15일 신안군 도초면 도초중·고교 체육관에서 열린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노인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점심을 먹은 뒤 갑자기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비급대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초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제공한 삶은 돼지고기와 흠이, 김치 등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산재 사망률 0.78%

# 광주·전남 전국 최고

광주지방노동청 관할 지역인 광주·전남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산업재해율도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재윤(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의 사고사망 만인율은 0.78%로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근로자 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0.78명이라는 의미로, 전국 평균(0.56%)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 고구마 캐기 체험

15일 광주시 남구 양과동 생태농장에서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고구마를 캐고 있다. 광주시 남구는 올 가을 개최하기로 했던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이 신종플루 여파로 취소되자 고구마 수확기에 맞춰 주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열었다.

/위적량기자 jrww@kwangju.co.kr

# 광주·전남 경찰 통신자료 요청 2만5천건

# 이명박정부 들어 급증

권한해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 최인기(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광주·전남 경찰의 통신자료 요청건수

# '청산가리 막걸리 살해 사건'

# 17년 된 청산가리 효력 공방

# 검·변호인 법정 다툼

지난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해 사건'이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의 효력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준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딸 B(26)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핵심 쟁점인 청산가리의 효력 등에 대해 심리를 벌였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청산가리의 효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청산가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이산화탄소와 접촉하고 습기를 머금게 돼 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A씨가 17년 전부터 창고에 보관해온 청산가리는 유독성을 잃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 변호인은 보관기간에 따른 청산가리의 유독성 변화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막걸리와 청산가리의 경우 구입처 등을 모두 파악한 만큼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B씨가 이웃주민 C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것은 살인 동기를 방증하는 절대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A씨 부녀는 지난 7월초 돌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탄로나 갈등을 빚어온 A씨의 아내 최모(59)씨를 살해하기로 결심,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최씨 등 4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하태민기자 hagija@kwangju.co.kr

# '광고 안취?' 비방 기사 - 징역형

○"광고를 주지 않는다"며 비방 기사를 실은 지역신문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이 선고.

○"광주지법 장흥지원 지귀연 판사는 15일 피해자를 비방하는 기사를 실은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강진모 신문사 편집국장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A씨는 광고를 수수하려고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 처럼 행동하고, 실제 비방 기사를 실는 등 언론기관의 책임과 윤리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

○"A씨는 지난해 12월께 강진지역 모 동창회 관계자에게 광고를 실이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동창회 등을 비방하는 기사를 실은 혐의로 기소.

/장흥=김용기기자 kykim@

**YHB가 해결**

YHB

**산水土風**

전통식품 100%

062)434-8001